

시론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사)생명존중 뇌건강치과 AI연구소 대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때로는 넘어서는 문명사적 전환기다.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환호하면서도, 동시에 존재론적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고, 판단이 자동화되는 만큼 '인간다움'은 무엇으로 남는가 하는 질문이 더 선명해진다.

이런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지역의 젊은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이 '공주 경영학당'을 만들었다. 그들은 근본 없는 최신 기법이 아니라, 도전의 본질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습하고 토론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곧 '망치의 기록'이었다. 소크라테스(BC470-BC399)는 '무지의 자각'이라는 망치로 오만을 두드려 성찰하는 인간을 세웠고, 예수(BC4-AD30)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망치로 용서와 화해라는 관계의 존엄성을 일깨웠다. 공자(BC551-BC479)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는 서(恕)의 망치로 도덕적 질서를 세웠으며, 석가모니(BC624-BC544)는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皆有佛性:개유불성)'라는 망치로 탐욕의 분별을 끊는 자비와 지혜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근대의 여명에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는 "나는 망치로 철학 한다"라는 강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XIV

-AI 혁명 시대의 인문학적 망치, 'TRUST(신뢰)'

렬한 선언을 통해 절대적 진리라는 낡은 이상을 깨고, 주제적 삶의 의지를 일깨웠다. 이들의 망치는 맹목적 파괴가 아니라, 관습과 공포에 갇힌 영혼을 구출해 내는 '창조적 파괴'의 도구였다.

창조적 혁신가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혁명이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1875-1961)이 통찰했듯, 진정한 변화는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성찰에서 시작된다.

J. 데이비드 호킨스(1927-2012)의 '의식의 빛'이라는 틀을 빌리면 수치심(20), 죄의식(30), 무기력(50), 두려움(100), 분노(150), 결핍(175) 등 200 미만의 낮은 에너지의 무의식은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혁신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반면 용기(200), 중립(250), 의지(310), 사랑(500), 기쁨(540)에 이르는, 높고 밝은 의식 수준은 행동의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열쇠로 니체는 'Amor Fati(운명애)'를 제시한다. 그것은 운명이 순탄하기를 비는 태도가 아니라, 초라함과 부정성이라는 그림자까지도 껴안고 사랑하며, 그 힘을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의지다. 기술 진보의 광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창조적 파괴의 힘은 바로 이 생명력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이 시대 혁신가가 손에 쥐어야 할 인문학적 망치는 무엇인가. 필자는 '신뢰(T·R·U·S·T)'라고 답하고 싶다. AI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진정한 신뢰는 다섯 가지 실천으로 직조된다.

첫째, Touch-다정한 마음이다. 다정함은 타인의 불안을 낮추고 관계의 안전감을 만든다. 차가운 하이테크는 따뜻한 하이터치를 만날 때 공감의 신뢰를 얻는다.

둘째, Recreation-혁신 에너지의 회복이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산책이나 명상 등의 쉼으로 뇌에 휴식을 주어 부정적 강박을 비울 때 낮은 관심을 깨는 혁신 에너지가 회복된다.

셋째, Unique-대체 불가능한 창의성이다. AI가 모방할 수 없는 건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이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시장조사가 아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인문학적 직관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창의성이다.

넷째, Story-진정성 있는 서사다. 시련을 이겨낸 여정과 선한 공원에 의한 진정성 있는 서사는 가성비와 스펙의 수치에 의한 마케팅을 넘어 타인의 영혼을 매료시키는 거대한 신뢰의 뿌리가 된다.

다섯째, Together- 감사의 연대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조직을 지탱하는 힘은 '능력 있는 사람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겉순한 관계'에서 나온다.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껏 지키고 '감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인다.

인간이 AI와 공존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은 역설적으로 '인간다운 정체성의 회복과 사유의 힘'이다. 그 힘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수사나 아니라, 내면을 살피고 이웃과 마주하며, 밥을 먹고, 말하고, 웃으며, 배려하는 작은 생명 순환의 행동이 축적될 때 발휘된다. 낡은 두려움의 우상을 깨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다시 쥐어야 할 가장 위대한 인문학적 망치는 바로 '신뢰(TRUST)'다.

社說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조정 등 정개특위 책무 다해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의 지체 없는 개혁'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지역구의 인구 비율을 1대3으로 결정할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대로면 전국에서 위헌 선거구가 총 2천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원은 23명, 전남도의원은 61명으로, 인구수 차이를 고려할 때 대표성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 구조가 그대로 특별시의회에 적용될 경우 광역 1인 당 인구는 광주 6만9천명, 전남 약 3만2천명으로 큰 격차가 있다. 통합의회 출범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도의회는 갑당회를 마른해 통합의회 구성 방향과 절차, 주요 의제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 지각 출발했다.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6·3지방선거를 70여일 남긴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속도를 내야만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 현상이라도 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앞둔 만큼 이번에는 서둘러야 한다. 진보 정당이 요구하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 정수 30% 확대 등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깊이 숙고해야 한다.

정치권은 광주가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이는 점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치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라고 누누이 지적돼왔다. 전국적으로도 위헌 선거구가 속출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역사적인 초광역 통합의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정수 조정은 필요하다. 광주 지역구 광역의원을 늘리고 비례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 가축 감염병 잇따라, 축산품 물가 들쭉인다

육용오리 1만6천여마리를 사육하는 무안 현경면의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2025/26년 동절기 전국적으로 59번째다. 축종별론 닭이 39건, 오리 16건, 메추리 등 기타 4건이다. 전남에선 11번째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초동 조치를 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3월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철새 북상 시기와 맞물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합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신속한 가축 처분이 이뤄졌고, 청소·소독과 주변지역 환경 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24건이며, 전남은 4건으로 늘었다.

가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민축산식품부는 민생물가 TF 유통 점검팀을 가동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식용유 등), 마늘 등 4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계란은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제갈물가안정을 목표로 전격하고 있다. 부처별로 업계와 소통하면서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제과, 양산빵, 빙과류 값의 인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민축산식품부는 민생물가 TF 유통 점검팀을 가동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품의 경우 특성 상 공급 문제는 가격 형성에 직결된다.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물가 우려가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너무나 어려운 경영 여건을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도 국민적 고통 분담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물론 당국은 답답 의심사례 등을 포착하는 등 시장 교란엔 무관용으로 대응, 엄단해야 한다. 다소비 식품, 핵심 품목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축산 농가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자치칼럼



임우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이재명정부의 주민자치 법제화, 왜 지체되고 있는가?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1천600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역의 모든 읍면동에서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처럼 주민자치 법제화나 육성과정이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과 성숙과정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모든 제도나 정책은 긍정적, 부정적,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일부 보수세력 등이 주민자치를 좌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만 이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시각인 것이다. 주민자치 육성과정이 좌파들의 세력확대로 한다면 올바른 주민자치 육성방법을 제시하면 될 일이고, 주민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작년 말경 국회통과를 기대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개월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갑갑 무소식이니 어찌된 일인가?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고대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 보고자 한다.

주민자치의 전면실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화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역사가 인정하는 주민자치의 보편적 가치, 즉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이자 민주주의의 최선의 구현장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정착시켜야 할 일이다. 또한 주민자치 시범운영과정에도 드러난 것처럼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 함양을 본질로 하는 주민자치를 선거직인 단체장이 관 주도적으로 제도화해 가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임을 직시하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즉 단체장과 공무원이 정치적 개입과 행정적 우월성을 철저히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민을 존중하면서 주민의 자발·자주·자율의식 함양을 책임으로 인식하고,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주민(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지원체제와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의 육성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임을 알고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관 주도적인 주민자치 제도화는 주민의 자치가 아닌 관치의 확대 또는 말만의 자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이 있다. 주민자치 육성을 위한 법제화에 동의하면서도 제도화의 주체, 내용, 범위, 운영 등 제도 전반을 주민의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법안이 관 주도적 관변적 자치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 일부 보수세력들은 마을의 주민자치를 비롯한 교육공동체활동, 사회적 경제활동 등 마을공동체활동을 좌파의 세력확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의 좌파정치세력과 지방의 좌파적 마을 활동가 등이 연대해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처리 당시에도 주민자치 관련 조항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끝에 삭제된 전례가 있으며, 현재도 여야 간의 시각 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보수세력들이 주민자치육성을 위한 법 개정에서 뜻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주권정부라 칭하는 이재명 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역량 제고'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자치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전면실시를 비롯해 주민선택읍면동장제와 재정분권 및 사무이양 등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주권정부라 칭하는 이재명 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역량 제고'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자치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전면실시를 비롯해 주민선택읍면동장제와 재정분권 및 사무이양 등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듯 본격적인 주민자치정책의 출발점인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확보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과정에 국회가 주민자치 관련규정을 전면 삭제해 버린 후 공감이가 확산돼 6년이 지나고 국회와 정부가 바뀐 지금에야 비로소 실현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작년 11월, 국회 행안위는 그동안 제안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을 종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고, 곧이어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지방자치법의

아침물어는

밤은 충전기다

박정식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진 아빠 한 밤 폭 자고 일어나신 -아침! 충전 잘됐다. 또 힘이 나는 걸.

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자칫 이 문법적 대립은 단결과 갈등의 씨앗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둘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 둘은 지극히 상보적이며 조화로운 대상으로 기능한다.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면서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된다.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다.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다. 낮과 밤은 균형을 이루며 상호 결속한 의존관계를 맺고 있다. 낮과 밤은 현상적 차원에서 보면 차별성을 지니지만 본질적 본성은 대등한 것이다. 이 정면은 서로 '원유무애'와 상통한다.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한결같이 평등해 현상과 이치가 서로 걸림이 없고, 나아가 차별적 현상의 존재 상호 간에도 원유무애하는 법이다. 이런 이치와 맥락을 통감하는 자는 꿰뚫어보고 있다. 아빠가 어젯밤에 폭 주무시고 나서 '아침! 충전 잘됐다. 또 힘이 나는 걸.' 하면서 일터로 나간다. 아빠의 새 활기는 그대로 해님으로 전이된다. 해님도 밤사이 충전을 한 후 아침에 밝아오듯 자태로 갈라지자 돼 맞섬과 대결의식

휘파람 불며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신다. 해님도 늘 그러신다. (동시집 '자전거 보조바퀴', 아침마중, 2015) [시의 눈] 낮과 밤, 이 둘은 서로 대조적이며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양의 이분법적 적대로 갈라지자 돼 맞섬과 대결의식

독자투고

한 연구에 따르면 젊음은 전이 만취 운전과 비슷한 약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누구나 젊음에는 약하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운전자라도 젊음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70%가 "졸음과 주시태만"이라고 한다. 장시간 운전시 참문을 열

젊음은 전, 당신의 인생을 알아갈 수 있다

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 주고 견과류 등 가벼운 간식은 안면 근육을 움직이게 해 젊음이 달아난다. 특히, 커피나 초콜릿 등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젊음 예방에 효

과가 좋다. 그리고 젊음이 찾아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휴식 시에는 휴게소나 젊음쉼터 등을 이용하도록 하자. (김창호·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문의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 고 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두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